



독도사수연합회

http://dokdomk.com

발행일: 2013년 3월 5일 607-809 부산시 동래구 명장로63번다길 35 TEL.FAX.겸용 051-782-9174 E-mail, ds5ean@naver.com HP. 010-6504-6510

계간12호 발행자 편집자: 이상훈 /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장로 63번 다길 35 / 신고번호: 동래 바00001 / 신고일 2012, 05, 18 / 인쇄 (주)동아인업 (051)807-06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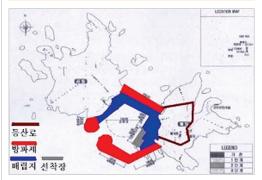
독도소식지 12호를 내면서

독도소식지 12호를 몇 일 늦게 내게 되었습 니다. 여러분들의 참여가 더 좋은 독도소식지 를 낼 수 있다고 봅니다. 당신은 독도의 주인입 니다. 주인이 지켜야합니다. 독도 수호 운동에 참여하세요. 도와주시면 좀 더 좋은 소식지가 됩니다. 편집자

독도사수연합회의 정책제안

- 1. 독도연구기관에 연구비를 많이 투자하여 심도 있 는 연구로 일본의 주장이 잘못 되었다는 것을 반 박하며 억지를 쓰는 것을 국제사회에 알려합니다.
- 2. 우리 땅 독도의 자유로운 입도와 주거자유를 보장 해서 한국 사람이 많이 살고 있다는 것과 한국이 실효지배를 하고 있는 것을 국제사회에 알려야 합
- 3. 독도를 관광지로 개발하여 독도에서 주민이 수입 을 올릴 수 있게 하고, 독도는 한국의 관광지라고 국제사회에 알려야 합니다.
- 4. 독도를 지킨 독도의용수비대를 국가최고유공자로 모시고, 독도수비의 공을 높이 평가하여 우리 땅 을 지킨 분들이 예우를 받는 것을 국내와 국제사 회에 알려야 한다.
- 5. 잘못 맺어진 신 한 · 일 어업협정을 파기하고 배타 적 경제수역 주권을 회복하여 한국은 독도의 주권 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국제사회에 알려야 합니 다. (이것을 정부가 하면 국제 법으로 유리하다)

독도개발안(관광객700명일평균예상)



- 1. 독도방파제를 만들어 파도로 인해 접안을 못 하는 것을 접안 하도록 한다.
- 2. 동도 정상에 관광객이 올라 갈수 있게 하고 정 상에서 내려오는 길을 북쪽 방피제로 하여 관 광객이 동도를 전부를 발고 지나온 기분이 들 게 한다.
- 3. 북쪽 방파제에 도착 하여 서도에 바다가로 주 민 숙소까지만 갈수 있게 한다. 독도에 머무는 시간 현제 30분인 것을 5시간 정도로 한다. (관 광객 하루 평균 500~800명에게 독도주민이 장 사가 될 수 있게 하여 지원을 받지 않고 스스로 살 수 있게 한다. 어업전진 기지를 좋다)
- 4. 서도와 동도 사이에 최소한 주민들이 20가구 살 수 있도록 방 한간 부엌 한간으로 20가구 짓 고 어민 7가구 횟집 4가구 기념품가게3개 수퍼3 개 그 외 필요한 가게 3개정도를 만든다. 서도 에는 동도 쪽 바닷가 에만 관광객이 머물고 그 외는 생태계를 보호한다.

제안자: 독도사수연합회 회장 독도 이상훈

日, 독도 포함 영토분쟁 전담부서 확대 강화(독도 침략 전담부 설치)

손희동 기자 이메일 sonny@chosun.com입력 : 2013.02.05 성이 맡고있던 센카쿠 대책 기능도 흡수한다. 14:50

담부서로 확대하기로 했다. NHK는 5일 일본 정부가 독도를 포함, 중국과 영토분쟁을 벌이고 있는 센카쿠 열도(중국명 다 오위다오)와 러시아와 마찰을 빚고 있는 북방 영토 등의 문제 를 전담할 '영토·주권 대책 기획 조정실'을 내각 관방에 신 설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내각관방은 내각의 보조기관으로 주로 총리를 지원하는 부서다. 그동안 독도문제를 관할하던 '다케시마 문제대책 준비팀'이 바로 내각관방 소속으로 활동 해 왔다. 일본 정부는 이 팀을 영토문제 전담부서로 확대 · 개 편하고, 내각부 산하의 '북방대책본부' 와 합치기로 했다. 외무

그동안 주변국과의 영토 분쟁과 관련해서는 내각관방과 내 일본 정부가 독도 문제 전담부서를 전방위적인 영토분쟁 전 각부, 외무성, 그리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대응해 왔다. 독 도 문제의 경우 시마네현이, 센키쿠 열도의 경우 오키나와현 도 당사자였던 셈이다. 새로 신설되는 영토 · 주권 대책 기획 조정실은 영토분쟁 지역이 일본의 영토임을 대내외에 홍보하 는 동시에, 정부 내에서 조정 업무를 총괄할 예정이다. 일본 정 부 관계자는 "일본 정부의 주장을 정당화할 수 있는 체제를 강 화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은 이미 지난해 일본 과 영토 문제가 커지면서 일찌감치 전담 부서를 꾸린 바 있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해 9월 '중국 공산당 중앙 해양권익 유지공작 소조'를 설치, 센카쿠 문제에 대응해 왔다.

독도문제 강력한 항의와 철회요구(일본이 한번 이라도 들어 준 적이 있나?)

일본은 독도를 빼앗기 위하여 옛날부터 틈틈이 자기네 땅이 라고 주장을 하였지만 우리정부는 조용한 외교를 하고 있었 다. 지금도 우리 정부가 하는 대처하는 수준은 일본과 경제문 제를 염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영토문제는 경제문제보다 우선 이다. 일본이 독도를 뺏기 위해 전담부서를 설치한다는데 왜 우리정부는 독도를 개발하여 20가구정도 들어가 살도록 하지 못 하는가? 일본은 국제재판을 하려고 하지 않는가? 유엔 안

보리 개입이 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재판에 응해야 할 경우가 있을 수도 있지 않는가? 정부 각 부처나 경북도, 울릉군. 시민 단체들이 일본을 규탄만 한다고 될 일인가? 지금이라도 정부 는 독도사수연합회가 서명운동 하는 내용을 이행 하라! 정부 는 독도 예산을 지금이라도 예산을 늘려라. 해상수송비가 육 상수송비 보다 높다. 일반인들 독도 가는 경비를 적게 들게 줄 여라. 독도사수연합회 http://dokdomk.com 회원 일동

日대학생에 "독도 누구 땅?" 물었더니 결과 '경악'(일본인 독도 모른단 말 옛말)

입력: 2013-01-03 07:47/ 수정: 2013-01-03 19:03

일본인 67%가 독도를 일본땅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조 사됐다. 일본 히로시마시립대 평화연구소 김미경 부교수는 일본 시마네 · 오이타 · 히로시마현 주민과 리쓰메이칸(立命館) 아시 아-태평양 대학의 일본인 학생 등 440명을 상대로 지난해 4월과 8~11월 두 차례에 걸쳐 조사를 했다. 이번 조사 결과 91%(399명) 가 "독도 분쟁에 대해 들은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응답자는 주로 TV와 신문을 통해 관련 정보를 얻는다고 대답했다. 또 "다케시마 (독도의 일본 명칭)는 일본 땅"이라고 생각한다는 응답자는 67%(293명)에 달했다. 일본인 10명 중 7명이 독도를 일본 땅이라 고 인식하는 것이다. "다케시마가 일본 땅이 아니다"는 응답은 2%(7명)뿐이었고, 27%(118명)은 "모른다"고 답했다. "독도의 위 치를 알고 있다"는 응답자는 76%(336명)로 조사됐다. 독도 문제 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한일간 무력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에 대한

물음에는 "없다"가 43%(187명), "모른다"가 30%(134명), "있다" 가 22%(%명)로 나타났다.독도 문제 외에 중국과 일본간의 센카 쿠(중국명 다오위다오)열도 분쟁에 대해선 %%(423명)가 "들은 적 있다"로 답해 절대 다수가 영토분쟁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것 으로 드러났다. 69%(305명)은 센키쿠를 일본 영토로 생각하고 센 카쿠 열도의 위치를 알고 있다고 답변한 이들은 81%(355명)이다. 센키쿠 분쟁으로 중국이 일본을 공격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 냐는 질문에는 "있다"가 33%, "없다"가 30%로 나타났다. 이에 대 해 김 부교수는 2010년 9월 센키쿠열도 부근의 중일 선박 충돌 사 건을 계기로 일본 국민이 영토분쟁에 대한 관심이 커졌고, 인지도 도 높아졌다다고 풀이했다. 김 부교수는 기존의 일본 국민이 한국 국민보다 영유권 갈등에 관심이 없다는 주장은 이제 설득력을 잃 었다고 지적했다.

한경닷컴 최수아 인턴기자 suea@nate.com

재일동포 차세대, '우리이름' 많이 쓰고 '독도는 한쪽 영토 아니다'생각

(토) 10:01:44이종환기자 stonevalley@naver.com

재일동포 차세대들 가운데 실생활에서 일본이름을 사용하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독도 영유권에 대해서는 어떻게 여길까? 우 리말은 얼마나 잘 할까? 이런 질문을 담은 재일동포 차세대 의식 조사의 결과가 나왔다. 일본에서 발행되는 통일일보는 지난해 11 월말부터 12월 중순까지 18세에서 35세 사이의 재일동포 차세대 138명을 상대로 설문조시를 실시해, 그 결과를 신년호에 게재했 다. 재일한국청년회가 이 조시를 도왔다. 이 조시에 따르면 독도 영유권에 대해서 '한국영토'라고 답한 사람이 50명(36%), '일본 영토'라는 답이 17명(13%), '어느 쪽도 아니다' 와 '그 외'라는 답 을 합친 수가 71명(51%)으로 나타났다. 소수의견으로 '병기하는 게 좋겠다' '잘 모르겠다'는 답도 나왔다. 독도가 한국땅이라고 생각하는 차세대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게 이례적이다. 또 실생활

통일일보 '재일동포 차세대 의식조사'결과 2013년 01월 12일 에서 일본이름을 쓰는 것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뤄졌다. 우리이름 을 사용하는가 하는 질문에는 우리이름만 사용한다'가 45명 (33%), '갈라서 사용한다' 가 59명(43%), '일본이름만 사용한다' 가 32명(23%)로 답했다. '일본국적을 취득하는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 는가'는 질문에는 '찬성'과 '대찬성'이 15명(11%), '반대' '대반 대'가 37명(27%), 가장 다수를 차지한 것은 '어느쪽이라도 좋다' 가 69명으로 과반수를 넘었다. 재일한국청년회는 지난해 11월24일 '우리미래축제'에서 우리이름 사용과 관련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편의적으로 사용하는 일본이름을 쓰지 말아야 한다는 안건에 대 해 찬성 55% 반대 45%로 나타나 우리이름만 사용해야 한다는 의 견이 우세했다. 통일일보 조사 결과도 재일한국청년회 토론회 조 사 결과와 일치해, 실생활에서 우리 이름 사용이 많은 것으로 밝

비영리 단체 : 독도사수연합회

구독신청: FAX 051-782-9174 H·P 010-6504-6510

보라! 독도를 "다케시마"라 하며 일본의 행사에 분통을 터트리는 모든 애국 시민들 일어나라!











上 주한일본대사관 앞 집회 후 서울시의회에서 회의 下 부산자유총연맹. 독도학당. 상훈회. 시민단체들 집회



- 上 독도시수연합회 현수막과 10개 국어로 만든 독도전시물 중 3개 국어로 된 전시물. 일본인과 세계인들은 일본의 침략역사를 알고 있습니까? 자료를 보십시오.
- 下 부산 애국시민단체들이 분통을 터트리며 일본을 규탄하며 독도시수를 결의 한다.











비영리 단체 : 독도사수연합회

『1910년 韓日병합조약』 유효론과 獨島 領有權 문제 8편



왜 일본에 대해서는 이 전략적이고 실용적인 이유 에서의 파격(破格)을 -대단히 부자연스러운 대로-감수할 수 있었으면서도 독일에 대해서는 그것이 불 가능했을까? 다시 말해서 독일의 군사적 잠재력을 소련을 중심으로 한 공산세력의 군사적 진출을 유럽 에서 방어하기 위한 전략적 동반자로 활용하기 위해 서 뉘른베르그 국제 군사재판에서 '히틀러'를 전범 자 명단에서 제외시키고 독일의 전쟁 책임을 면제시 키는 것과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이러한 '편의주의적 파격' 은 적어도 유럽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유럽에서 나치 독일의 전범자 들에 대한 처벌과 응징은 집요하고도 철저한 것이었 다. 왜 이러한 차이가 나오게 되는 것일까? 일본은 애를 써서 일본 제국(帝國)의 한반도와 중국 "진출" 이 독일 나치국가의 유럽"침략"과는 구별되는 대단 히 합리적이고 온건한 군사행동이었다고 강변하고, 히틀러의 「아우슈비츠 집단살해 행위」와 같은 잔학 하고 야만적인 기록이 일본의 경우에는 전무하기 때 문에 2차 대전 중 독일과 일본의 행위는 당연히 구별 되어야 한다고 변명한다. 그러나 일본 군대의 위안 부 징집과 성노예(性努隷)로의 학대(謔待)행위, 남 경 대학살 및 인간을 "나무토막"으로 간주하여 세균 전 기술을 개발한 관동군 731부대의 인간 생체실험 기록들은 일본의 침략행위가 갖는 잔학성과 야만성 이 독일 나치국가의 그것과 구별되기는커녕 그것을 훨씬 능가하는 것이라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일본

의 이러한 변명은 우선 논리적으로 성립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일본에 대해서만 예외적이고 '편의 적인 파격'이 허용되는 데에는 똑같이 잔혹하고 야 만적인 침략을 자행한 두 패전국, 전범(戰犯)국가 즉 독일과 일본의 행위에 관한 연합국 주체들의 '문화적 평가'에 차이가 있다고 보아야만 한다. 일본은 동양 국가이며 일본이 침략의 과정에서 잔학하고 야만적 인 행위를 자행한 대상은 (물론 사소한 예외가 있겠 으나) 중국, 한국 등 동양 국가들이다. 동양인들간의 법적, 윤리적 기준은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 등 서방 세계가 잘 이해할 수 없는 〈별개 문화권의 현상〉이 다. 그러므로 같은 서방 국가인 독일이 유럽인들에 게 자행한 잔학하고 야만적인 행위를 응징하는 것과 똑 같은 법적, 윤리적 기준을 이들 동양 국가들에게 적용하지 않고 다소 '편의적인 파격'을 적용하는 것 은 『가능하고 또한 허용되는 것』이라고 그들(미국의 정책 결정자들)은 판단한 것이다.잔학하고 야만적인 침략전쟁을 실제로 직접 주도한 일본 왕(히로 히토) 을 전범(戰犯)의 범위에서 정책적으로 제외시키고 (그는 동경 국제군사재판에서 전범으로 기소되지 않 았다)아무런 주저 없이 일본 국가의 전쟁 책임을 면 제시킨 연합국들 특히 미국의 정치적 편의주의는 이 렇게 밖에는 설명될 수 없다.

(다음호에 계속) 홈피 교수논문에서 볼 수 습니다. 독도 이상훈

中 시진핑, 센카쿠 관련 "전쟁준비 강화하라"

軍에 지시… "전쟁하면 반드시 승리해야"

시진핑(習近平) 중국 공산당 총서기 겸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이 최근 일촉즉발의 위기로 치닫고 있는 중・일 간 센카쿠(尖閣)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갈등과 관련해 전쟁 하면 이길 수 있도록 군사훈련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힌 것으로 7일 알려졌다. 시진핑 총서기는 지난 4일 란저우 (蘭州)군구를 방문, "군사투쟁 준비를 강화하고 군의 정보 화 수준을 높여 전쟁을 할 수 있고, 전쟁하면 반드시 이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신화(新華)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시 총서기는 또 군의 기율을 엄격히 다져 군령 이 신속히 전달되고 이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낭비를 없애는 등 근검절약 풍조를 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 총서기의 이 같은 발언은 중·일 간 점증하고 있는 센카 쿠 갈등과 관련해 일본 및 미국측에 보내는 단호한 메시 지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중국 총참모부는 연초 각 군에 내려보낸 '2013년 전군 군사훈련 지시'에서 전쟁능력을 키우고, 일단 시작한 전쟁은 승리로 이끌 수 있는 실력을 배양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군사훈련을 진행하라고 명령 했으며 이후 중국 군 지도부는 수시로 '전쟁능력'과 '필 승'을 역설하고 있다.

한편 센카쿠 열도 주변 해상뿐 아니라 동중국해 상공에서는 미·일·중 전투기들이 50km까지 근접비행전을 상시적으로 벌이면서 양측 간 우발 충돌 가능성은 더 높아지고 있다.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관방 부장관은 6일 양국 간 우발적 충돌을 막기 위해 중·일 양국 군당국 간 핫라인 구축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일본 산케이(産經)신문에 따르면 중국 전투기가 지난해 12월 이후 센카쿠 주변 상공에서 자위대 전투기에 50~100km 거리까지 근접비행하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센카쿠 주변 해역에는 미군의 AWACS와 조기경계기 E2C도 배치돼 중국 전투기의 동태를 감시하고 있다.

박세영 기자 go@munhwa.com

독도문제가 언제 중국과 일본의 다위오다오(일본 명 센카구열도) 처럼 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다. 미국이 전쟁은 말릴 수 있어도 국제재판은 말릴 수 없을 것이다. 독도 이상훈

독도 영유권 문제 대사관에 문의했더니

http://dc.koreatimes.com/article/773575 입력일자: 2013-01-18 (금) 韓 묵묵부답 VS 日 즉 각 응대

한인 여고생 "일본 담당자 너무 친절해 그의 말 민고 싶은 생각들었다" 최근 백악관 인터넷 민원 청원사 이트에 독도와 관련한 한 · 일 양쪽의 청원이 모두 공식답변 기준인 2만5,000명을 넘어서는 등 독도 영유권에 대한 한 · 일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뜨겁지만, 양국 대사관의 반응은 온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메릴랜드의 한인여고생 박 모양은 지난해 말 4차례에 걸쳐주미한국대사관에 독도 영유권 관련 정보 및 설명을해줄 수 있는 담당자를 추천해달라는 이메일을 보냈다. 미국에서 출생했지만 한국에 대한 긍지와 남다른 애정을 갖고 있는 박양은 학교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선뜻 한일간의 독도 영유권 분쟁을 선택했고, 주미 한국대사관과 일본대사관의 웹페이지에 나온 이메일 주소로 도움을 요청했다.

일본대사관에서는 친절한 설명을 담은 답장이 바로 왔고, 답변해줄 사람이 먼저 박양에게 전화를 걸어 '다케시마(독도의 일본명)가 일본 영토'인 이유를 자 세하게 설명했다. 박양은 "독도가 한국땅이라는 것을 확신하지만, 일본인 담당자의 설명이 너무 친절해 (그 의 말을) 믿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전했다. 이와

달리 한국대시관은 한 차례의 답장도 없었다. 독도가 한국땅임을 입증해 보이려는 생각에 신나하던 딸이 한국대사관의 무성의에 낙담하자, 부친도 나서 이메일 로 대사관에 협조를 요청했지만 역시 묵묵부답이었 다. 다만 대사관의 답장이 없자 박양이 대사관 웹페이 지에서 찾아 주소를 추가한 보스턴총영사관에서 자신 들의 담당이 아니라며 외교통상부의 독도관련 웹사이 트 및 대사관의 다른 이메일 주소를 알려줬을 뿐이다. 한국대사관 영문 웹페이지에 나오는 이메일 주소는 consular_usa@mofat.go.kr. 대사관에 문의한 결과 총영사관 이메일이라고 했다. 다시 총영사관에 문의 하니 전화를 받은 직원은 이 주소는 민원용 이메일로 하루 수백통이 들어오기 때문에 일일이 확인하기 힘 들고, 스팸메일로 처리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름을 밝 히지 않은 이 직원은 박양의 사연을 전하자, 받은 이메 일을 확인하기 힘들다며 다시 한 번 보내보라고만 말 했다. 박양의 얘기를 전해들은 지역 한인들은 "한국대 사관 업무처리 시스템이 일본대사관보다 못한 건지 독도 문제에 대한 관심이 적은 건지 알 수 없지만, 양 국 정부는 물론 국민들이 민감하게 대응하고 있는 사 안에 대해 한국대사관의 대처가 미흡하다는 것을 보 여준다"고 꼬집었다.

〈박기찬 기자〉

[문화재청 실수] '일본해(동해)'로 표기된 지도, 6일 동안 몰랐다니...

문화재청, 문화유산 테마유산 서비스 표기 오류...사 과나 재발방지 대책 있어야 13.01.22 20:181최종 업데이 트 13.01.23 07:561

이윤옥(koya26) "국가기관인 문화재청에서 지도 서비스를 한다기에 둘러보는 중에 너무 놀라 메일을 보냅니다. 동해 자리에 일본해(동해)로 표기된 지도 를 서비스하고 있군요. 문화재청이제정신인지 궁금 합니다."

(지면 관계상 이만 본문을 보시려면 독도시수대 "심 각한 독도게시판 184번 글을 보세요)

주중 한국대사관, 중국 언론에 '독도수첩' 배포

일 언론, '중국의 지지 얻어낼 목적' 분석 외신팀 taobao_1@hanmail.net 승인 2013.02.09 15:31:54



중국 베이징 주재 한국 대사관은 '독도 표기가 있는 수첩'을 제작해 중국 언론 관계자들에게 배포한 사실 이 8일 드러났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8일 베이징발로 보도했다. 교도통신은 독도는 한국과 일본이 영유권 을 주장하고 한국이 실효지배하고 있다면서 수첩 배 포는 영유권이 있다는 것을 재차 어필(appeal)하고 다오위다오(釣魚島=조어도, 일본명 센카쿠 열도)를 둘러싸고 일본과 대립하고 있는 중국의 지지를 얻어 낼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통신은 중 국 언론에 배포된 독도수첩 표지에 '독도, 한국의 아 름다운 섬'이라는 글이 기재돼 있으며 섬의 풍경과 바 다 한 가운데서 한국 태극기를 펼친 사람들의 사진이 게재돼 있다고 전했다. 한국 대사관측은 "한국의 아름 다운 곳을 소개하는 목적이며 정치적인 목적이 아니 다"고 설명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저작권자 ⓒ뉴스타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독도주인들이여

일본은 독도를 뺏으려 하는 것은 알면서 왜 지키려 노력하지 않는가? 독도의 배타적 경제수역은 공동수 역이 되고(즉 독도마당이 공동마당) 세계 각국지도에 는 일본해와 "다케시마"로 표시 되고 있다. 넓은 바다 가 돈이다. 지도표시는 세계인들에게 일본 땅으로 인 식 시킨다. 그래도 옛날지도에 독도가 우리 땅으로 표 시 되었다고 안전한가요? 나라가 안 되면 당신의 자 식이 잘 살수가 없지 않습니까? 자식 잘 살아라 고 공 부만 시키면 나라가 망해도 자식이 잘 살 수 있습니 까? 내 자식 잘 살게 보험 드는 셈치고 독도에 관심을 가지고 회원 가입하여 1년에 하루라도 독도를 지키기 위해 자원봉사 하세요. (독도사수연합회)

일본 자민당 간부 "독도 전담 부서 설치"



비행기에서 바라본 독도의 모습(자료사진)

(도쿄=연합뉴스) 김종현 특파원 = 일본의 집권 여당 당직자가 독도 문제를 다룰 영토문제 전담 부서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23일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자민당의 호소다 히 로유키(細田博之) 간사장 대행은 이날 오전 독도 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시마네(島根)현 오키(隱岐) 섬의 마쓰다 가즈히사(松田和久) 정장을 만나 이 런 의향을 표명했다.

호소다 간사장 대행은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는 독도 문제를 전담할 영토문제 담당 부·국 (部・局)을 정부 내에 신설하는 방향으로 조정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오키섬 정장에게 "아베 신조 총리에게 '영 토담당 부서가 없다는 것은 좋지 않다'고 말했다" 면서 "(전담 부서 신설이) 거의 그대로 될 것이다" 고 밝혔다.



일본 자민당 간부 "독도 전담 부서 설치"

(도쿄 교도=연합뉴스) 일본 집권 자민당의 호소다 히로유 키(細田博之) 간사장 대행은 23일 오전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시마네(島根)현 오키 (隱岐)섬의 마쓰다 가즈히사 (松田和久) 정장(町長)에게 "한 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는 독 도 문제를 전담할 영토문제 담당 부·국(部·局)을 정부 내에 신설하는 방향으로 조정 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은 호소다 간사장 대행. 2013.1.23 〈〈국제뉴스부 기사 참조〉〉

시마네현 1구가 선거구 인 호소다 간사장 대행은 시마네현 주관으로 2월 22 일 열리는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참석하기로 했다.

호소다 간사장 대행의 말 대로 일본 정부가 독도 문 제를 다룰 영토문제 전담 부서를 부서를 설치할 경우 한국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 된다.

일본 정부는 '다케시마 의 날' 행사를 정부 행사로 승격하려다 한국과의 외교 관계를 고려해 올해는 일 단 유보했고, 독도 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 단독제소 도 연기했다.

kimjh@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 단전재-재배포금지.〉 2013/01/23 16:27 송고

姚明弘士 내용입니다.

독도 지킬 방법을 제안 합니다.

독도사수연합회 회장 독도 이상훈



고종황제 독도칙령112주념 기념식에 참석하신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이 행사는 국제 법으로 독도가 우리 땅인 것을 증명하는 자리입니다. 저는 부산에서 고종황제 독도칙령112주념 기념식을 하는 관계로 여러분을 직접 뵙고 인사드리지 못하고 지면을 통하여 인사 말씀 올리게 되어 대단히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기념식이 전국 각지에서 많이 할수록 국제사회에 널리 홍보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서면으로나마 독도를 지킬 방법을 제안 하 고자 합니다.

'독도사수연합회'는 요구합니다.

아래 내용을 대통령과 국회의장께 요구합니다.

- 1. 독도 박물관을 국립 박물관으로 승격하여 독도연 구비 투자를 많이 하십시오.
- 2. 우리 땅 독도에 대해 자유로운 입도 보장과 독도 문제는 정부와 시민이 함께 나서야 합니다. 주거자유 보장 하십시오.
- 관광지로 홍보 하십시오.
- 모시고 독도 수비의 공덕을 높이 기려 주십시오.
- 배타적 경제수역 주권을 찾아 주십시오.

'독도사수연합회'가 주장 하는 이유는?

으로 인식시킬 수 있습니다.

적을 알려야 합니다.

신 한일어업협정은 절반의 주권입니다. 나머지 반의 주권을 찾아야 독도권리를 모두 행사하는 것입니다.

독도 시민단체들이 할 일.

독도단체 중, 어느 단체도 독도를 지킬 방법을 구체 3. 독도 관광지 개발하여 관광수입 올리고 국내외에 적으로 제시하지 않습니다. 독도단체 중에는 문화로 지키자는 단체, 국제 홍보로 지키자는 단체도 있습 4. 독도지킨 독도 의용수비대를 국가 최고 유공자로 니다. 이러한 운동은 복합적으로 하는 것이 효과적 이라고 생각 합니다. 문화로 지키면서 정부가 잘못 5. 잘못 맺어진 신 한일어업협정파기, 재협상하여 하는 부분을 고치라고 요구도 하고 독도행사를 같이 하고 국제적 홍보를 하는 단체도 문화와 요구를 함 께 하면 독도 지키는데 더욱 효과적 일 것입니다. 독도단체들이 서로 힘을 모으자는 뜻입니다.

독도연구를 많이 하면 논리적으로 일본을 이길 수 정부가 일본과 정면 대결하면 국제 법으로 나올 가 있다고 봅니다. 사람이 많이 살면 국제 법으로 유리 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보통 국제재판은 양국합의 하다고 봅니다. 관광지 개발하면 독도주민들이 장사 없이는 할 수 없는 것으로 알지만, 『독도 인 더 헤 해서 생계가 해결되고 국제사회에 홍보하여 우리 땅 이그』저자 정재민 판사와 국제인명사전에 저명 법학 자로 13번이나 등재된 국제법학자 김영구 교수님은 독도의용수비대가 독도를 지키지 않았다면 옛날에 당사자의 뜻에 관계없이 국제재판을 한 경우가 상당 일본 땅이 되었을 것입니다. 세계 각국에 이들의 공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재판을 안 해도 준비는 해 두 자는 것입니다.

일본 정치인과 극우파들에게!! "역사 왜곡 하지 말라는 말과 침략 근성을 버리라"

독도를 일본 땅으로 주장하는 일본 당국과 단체에 "제삼국 학자들이 보는 앞에서 시민단체끼리 학술회 의를 하자. 일본 역사자료와 대한민국역사 자료를 대조해 보자. 일본이나 대한민국이나 어디든지 좋다" 고 제안합니다. "일본의 선량한 국민들이여. 한국과 일본은 이웃나라이다. 역사를 바로잡고 이웃의 정감을 듬뿍 가지자" 2012년10월25일

독도소식지 12호의 편집을 끝내면서 독도를 지키려고 노력을 하지 않는 국민들에게 한번 더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당신의 후손이 사용해야 할 독도입니다. 당신이 회원이 되면 독도는 지켜집니다. 편집을 도와주신 황성일사장님 감사 드립니다. 독도 이상훈 010-6504-6510 ds5ean@naver.com

> 후원 하실 분 법인통장 우체국 601229-01-002084 독도사수연합회

독도사수연합회 회원 가입 원서

| | | | 생년월일 : | | | |
|------|--------------|-----------------------|------------------------|--|---|---|
| (자택) | | | (직장) | | (휴대폰) | |
| (자택) | | | | | | 우편번호: |
| (직장) | | | | | | 우편번호: |
| | | | 소속단체 : | | | |
| | | | | | | |
| | | | | | | |
| 년납 (|) | | 월납() | | 회 비 | 자 동:이체() |
| } =년 | | 회 (할 수 있음) | (할 수 없음) | | 납 부 | 수시납:현금() |
| | (자택) (직장) | (자택) (직장) 년납() | (자택) (직장) 년납 () | (자택) (직장) (자택) (직장) 소속단체 : 년납() 월납() | (자택) (직장) (자택) (직장) 소속단체: 년납() 월납() | (자택) (직장) (휴대폰) (자택) (직장) 소속단체: 년납() 월납() 회 비 |

우리 땅 을 지키기 위하여 조금의 힘이라도 보태는 회원이 되기 위하여 독도사수연합회 회원 가입을 신청 합니다.

(印)

월 일 성명 년

독도사수연합회 회장 귀하

참고사항: 회비는 월1.000원 이상으로 자동 이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회원은1만원 이상)

(법인통장)우체국 601229-01-002084 예금주: 독도사수연합회

우편번호: 607-809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장로 63번 다길 35(명장동)

전화: 051-782-9174. 독도 이상훈 손전화 010-6504-6510

독도사수연합회 http://dokdomk.com E-email:ds5ean@naver.com/lsh54a@hanmail.net 보내세요.